

FTA,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FTA란?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란이 연일 방송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FTA란 무엇이고 무슨 문제가 있기에 논란이 계속 되는가? FTA를 통한 시장개방이 불가피하다면 이러한 소모적 논란과 그로 인한 국력낭비를 방지하며 FTA 정책을 수행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다 함께 고민할 때라고 생각한다.

FTA 협상은 두 나라(또는 지역) 사이에 이루어지는 시장개방 협상이다. 국제 교역에서 가장 큰 장벽으로 남아있는 것은 관세다. 따라서 시장개방 협상은 관세를 낮추는 협상으로 볼 수 있으며, FTA는 양국이 서로 관세를 철폐하여 상호 교역을 촉진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TA는 협상 여부와 상대국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FTA를 체결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는 물론

협상 대상국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상 대상국을 선택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협상 대상국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협상대상국을 선정하는 기준은 상대국의 경제상황, 양국 산업의 경쟁 또는 보완 관계, 배후시장 규모, FTA 체결 의지, 기타 정치·사회 등 경제외적 요소 등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농업부문 등 취약산업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FTA가 취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협상 상대국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FTA는 필요한가?

한편 일부에서는 FTA가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현재 국제적으로 수많은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국가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FTA는 이제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물론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예를 들면, 멕시코는 세계 32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FTA 협상도 매듭을 지을 단계에 와 있다. 이러한 멕시코 시장에 우리가 수출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멕시코와 FTA를 맺고 있는 경쟁국들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다. 경쟁국들은 관세를 물지 않고 수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관세를 물고 수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와의 FTA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 또는 필수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은 유럽연합(EU) 15개국을 중심으로 동유럽 13개국을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고자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대륙은 현재 미국-캐나다-멕시코로 이어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결속되어 있다. 이들은 다시 중남미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형성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면 미주는 34개국이 하나의 시장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 국가들의 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FTA 체결을 위해 협상 중이며,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FTA는 물론 ASEAN 국가들과의 FTA를 추진 중이다. 이쯤 되면 FTA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다가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다면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FTA를 체결하면 되는 것이지 왜 논란이 많은 것인가? 그 이유는 시장개방으로 이익을 보는 산업이 있지만 그 반대편에는 피해를 보는 산업이 있기 때문이다. 서로가 시장을 개방하면 시장이 커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쉽고, 국내외 기업 간에 경쟁을 촉진시켜 경제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이래 수출지향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성공한 나라이다. 이러한 성공은 시장을 개방한 교역 상대국, 즉 우리의 수출 시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시장개방은 경제발전과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좋은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을 개방하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이 낮은 상품을 중심으로 외국의 상품이 몰려들어 오는 결과를 초래한다. 시장을 개방하면 우리나라 상품보다 값싸고 좋은 물건을 생산하는 나라의 제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이러한 상품과 경쟁을 하는 우리 산업은 경쟁에서 밀려나게 마련이다. 이렇게 시장개방으로 수입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농업이다.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은 국제 가격에 비해 매우 높아 가격경쟁력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취약산업인 농업은 시장개방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이유로 농민들은 FTA 협상에 반대하

시장개방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존재한다. (중략) 갈등을 극복하고 원만하게 FTA를 추진하려면 손해를 보는 소수의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앞서야 할 것이다.

는 것이다.

우리의 과일시장 개방문제는 한-칠레 FTA 협상에서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관세철폐로 인한 과수 농가의 피해는 신선과일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피해와 가공용 과일의 수요 감소로 인한 피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인에 의한 과수산업의 피해는 10년간 4,5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FTA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피해를 입게 되는 산업이 FTA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

FTA를 원만히 추진하려면?

이러한 반대를 극복하고 FTA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피해산업에 대한 보상이 필수적이다. 피해보상은 관세철폐 등 개방조치로 가격이 하락하는 품목에 대한 일정 부분의 가격차 보전, 작목 전환 또는 휴경 보상 등 직접적 지원과 농업 및 농촌에 대한 기반시설 투자 등이 병행되어 해당 작목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 대다수의 합의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농업피해는 해당 품목뿐만 아니라 소비 대체효과 등을 통해 농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FTA 이행 특별법을 제정하고 7년간에 걸쳐 1조 원 규모의 투융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책 가운데 하나는 수입 증가로 농산물 가격이 평년 가격의 80% 이하로 떨어질 경우 떨어진 가격의 80%를 보상해주는 가격차 보상이다. 그러나 피해를 보는 농민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확실한 대책을 세운 다음에 FTA 비준안을 처리하라는 것이다.

시장개방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존재한다. 시장개방으로 국제경쟁력이 있는 산업은 수출 증대로 이익을 볼 수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국제경쟁력이 약한 산업은 외국 상품의 수입 증대로 손해를 보게 된다. 손해를 보는 측과 이익을 보는 측이 과도하게 부딪힌다면 불필요한 국력의 소모는 물론 사회적 불안과 갈등이 증폭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원만하게 FTA를 추진하려면 손해를 보는 소수의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앞서야 할 것이다.